

## 한국의 산업기술 부정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대안\* \*\*

이 정 원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 목 차 >

- I. 서론
- II. 한국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처벌규정 분석
- III. 한국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대안
- IV. 결론

### I. 서론

대한민국에서는 2006년 10월 27일 '산업기술의 부정한 유출을 방지하고 산업기술을 보호함으로써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가의 안전보장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이 제정되어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다.

\* 심사위원 : 성낙현, 양종모, 한인달

투고일자 : 2010. 2. 22 심사일자 : 2010. 3. 12 게재확정일자 : 2010. 3. 23

\*\* 이 글은 2009년 12월 9일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와 영남대학교 법 학전문대학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국제학술회의(대만법학과 한국법학의 만남)에서 발표한 것을 수정·보완한 논문임.

한국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기본적으로 산업스파이 범죄를 규율하기 위한 법률이다. 그러나 산업스파이 범죄 내지 경제스파이 범죄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이전부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었다. 즉 종래 영업비밀의 침해행위는 부정경쟁행위의 일종으로 취급되어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율하였으며, 영업비밀보호의 강화라는 차원에서 '부정경쟁방지법'은 1998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로 법률의 명칭이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따라서 산업스파이 범죄 내지 경제스파이 범죄에 관하여 부정경쟁방지법과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상당히 많은 부분이 중첩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단순히 국내에서 기업 상호간의 영업비밀 침해행위 뿐 아니라 본질적으로는 국가경제적 차원에서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규제한다는 점에서, 그리고 기업의 영업비밀 뿐 아니라 국가·연구기관 및 대학 등 산업기술의 개발·보급 및 활용에 관련된 모든 기관의 산업기술이 그 보호대상이라는 점에서 특별한 의미를 가진다.<sup>1)</sup> 또한 부정경쟁방지법이 사후적 규제를 중심으로 규정된 반면에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사전예방조치까지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sup>2)</sup>

그러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규정은 매우 부정확하다. 입법자들이 모든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대한 빠짐없는 형사처벌만을 염두에 둔 탓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동일한 행위에 대한 중복적 규정, 형사법 이론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규정 또는 과잉처벌규정 등의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처벌은 새롭게 구성해야 하는 문제 영역으로서 한국 뿐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어느 정도 시행착오를 거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고에서는 한국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형벌규정의 문제점을 형사법이론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에 대한 정확한 형사처벌의 기준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1) 김정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2009, 32면.

2) 김준동,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논의 자료집, 2007.05.21, 21-22면.

## II. 한국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의 처벌규정 분석

### 1.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1호에서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상기관<sup>3)</sup>의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하는 행위도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위반한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는 동법 제36조 제2항에 의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되며, 그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가중 처벌된다.

#### 1)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행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1호에서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수단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sup>4)</sup>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부정한 취득은 부정취득만으로 충분한 산업스파이 행위로서 그 가벌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각각의 수단에 의해서도 그 가벌성의 변화가 초래되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부정한 취득을 위한 수단을 법률에서 특별히 제한함으로써 그 가벌성의 범위를 축소할 필요는 없다. 또한 산업기술에 대하여 '절취·기망·협박 등에 의한 취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도 부적절하다. '절취·기망·협박 등에 의한 취득'은 원칙적으로 산업기술 자체에 대한 용어라기보다는 산업기술이 포함되어 있는 물체나 저장매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용어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에 대해서는 취득이 아니라, 획득이나 입수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3) 여기서 "대상기관"이란 산업기술을 보유한 기업·연구기관·전문기관·대학 등을 말한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5조 제4호.

4) 여기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은 모든 부정한 방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구성요건 내 제성이란 관점에서 절취·기망·협박과 동일한 불법 평가가 가능한 방법만을 의미하게 된다. 이에 관하여는 이정원, 형법총론, 인터넷 공개 제1판, 2009, 30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제1차 부정취득)한 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함으로써 또는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제1차 부정취득)한 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산업기술의 도면 등을 절취함으로써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제2차 부정취득)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4조 제1항의 부정취득에 해당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1항은 단순히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그 취득행위가 반드시 직접 대상기관으로부터 이루어져야 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는다. 또한 형사정책적 관점에서 산업기술의 부정취득행위를 제1차 부정취득행위로 한정할 특별한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제1차 부정취득자로부터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부정취득하는 제2차 이후의 부정취득행위가 모두 여기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2) 그 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공개 행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1호에서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행위 뿐 아니라,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산업기술의 부정취득자가 그 부정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과 공개를 금지하는 것이다.<sup>5)</sup> 그러나 이러한 행위를 동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처벌되는 독자적인 범죄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한지 문제된다. 물론 산업기술의 부정취득과 부정취득한 산업기술의 사용이나 공개를 별개의 행위로 파악함으로써 2 범죄의 실체적 경합을 인정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부당하다. 산업기술을 부정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경우 이를 동일한 금지조항의 반복된 위반행위로 파악하는 것은 법 이론적으로 부적절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을 부정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은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

## 2.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사용·공개 행위

5) 동법 제14조 제2항에서는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함으로써,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는 행위와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다. 따라서 동조 제2항과의 관계를 고려하면 동조 제1항에서의 그 산업기술의 사용은 부정취득자가 직접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2호에서는 제34조<sup>6)</sup>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유출하는 행위 또는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sup>7)</sup>에 의하여 동법 제14조 제1호의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 1) 산업기술의 부정 유출행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2호에서는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유출하는 수단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신분자)가 해당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는 그 수단이나 방법과 관계없이 그 자체로 불법할 뿐 아니라, 산업스파이 행위로서 그 가벌성도 충분히 인정된다. 일반적으로 계약에 의한 비밀유지의무는 단순한 사법상의 채무불이행에 불과할 수 있지만, 그것이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인 경우에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충분히 부정유출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포섭할 수 있다. 따라서

6)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4조(비밀유지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상기관의 임·직원(교수·연구원·학생을 포함한다)
2. 제9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 업무를 수행하는 자
3.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등에 관한 승인을 검토하거나 사전검토,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4.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침해행위의 접수 및 방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
5. 제16조 제4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상담업무 또는 실태조사에 종사하는 자
6.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의 보호 및 관리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제2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산업보안기술 개발사업자에게 고용되어 산업보안기술 연구개발업무를 수행하는 자
8.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산업기술 분쟁조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9.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권한의 일부를 위임·위탁받아 업무를 수행하는 자

7)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36조 제2항은 그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규정이다.

산업기술의 부정유출을 위한 수단을 법률에서 특별히 규정할 필요는 없다.

## (2)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2호에서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부정하게 유출하는 행위 뿐 아니라,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1항 및 제2항은 이러한 행위를 범죄행위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부정유출자가 부정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그 자체로 유출행위에 해당할 뿐이며 별도의 독자적인 범죄행위로 다루는 것은 부적절하다. 오히려 산업기술의 사용이나 공개를 제외하면 동법 제14조 제2호의 부정유출은 그 자체로 의미를 상실한다. 즉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자는 해당 산업기술을 이미 알고 있는 자이므로 해당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하고 대상기관으로부터 산업기술을 끄집어내는 것만으로는 산업스파이의 불법내용을 구비하지 못한다.<sup>8)</sup> 따라서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자는 그가 알고 있는 해당 산업기술을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할 경우에만 비로소 그의 행위를 부정유출이라고 평가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동법 제14조 제2호의 '부정유출한 산업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불필요한 중복규정이다. 부정유출한 산업기술을 제3자가 사용하게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산업기술을 그 제3자에게 공개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즉 '부정유출한 산업기술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를 처벌하면서 '부정유출한 산업기술을 제3자에게 공개하여 제3자가 이를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동일한 법조문에서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것은 무의미하다.

## 3. 부정 취득·유출 산업기술에 대한 악의의 취득·사용·공개 행위와 산업기술 취득 후 악의의 사용·공개 행위

8)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2호의 산업기술의 부정유출은 이미 해당산업기술을 알고 있는 비밀유지의무자에 의해서 이루어지므로 해당 산업기술을 이미 취득하고 있다고 평가될 수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동조 제1항의 산업기술의 부정취득과 구별된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3호에서는 제1호(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또는 제2호(산업기술의 부정 유출·사용·공개 행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거나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sup>9)</sup>에 의하여 동법 제14조 제1호와 제2호의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 1) 부정 취득·유출 산업기술에 대한 악의의 취득·사용·공개 행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3호 전단에서는 제1호(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또는 제2호(산업기술의 부정 유출·사용·공개 행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의해서 처벌된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정 취득·유출된 산업기술에 대한 악의의 취득행위는 그 자체로 산업기술의 정당한 취득행위로 평가되지 않는다.

우선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제1차 부정취득)한 자를 기망하거나 협박함으로써 또는 산업기술을 부정 취득(제1차 부정취득)한 자의 컴퓨터를 해킹하거나 산업기술의 도면 등을 절취함으로써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취득(제2차 부정취득)하는 경우는 부정 취득된 산업기술에 대한 악의의 취득행위(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3호 전단)로 평가되기 이전에 동법 제14조 제1호의 부정취득에 해당한다.<sup>10)</sup>

기망·협박·해킹·절취 등의 방법이 아니라 협상이나 애원 등의 방법으로 제1차 부정취득자로부터 해당 산업기술을 구매하거나 무상으로 획득하는 경우에도 부정 취득된 산업기술에 대한 악의의 취득행위(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3호 전단)로 평가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그 이전에 산

9) 그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에 대한 가중처벌 규정.

10) 上記 II., 1., '(1)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행위' 참조.

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행위로 해석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 이는 긍정되어야 한다. 행위자가 해당 산업기술이 부정취득되었다는 사실을 알면서 입수하는 경우라면 어떤 방법이나 수단을 사용하든 관계없이 이를 정당한 입수나 획득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며, 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이러한 산업기술 취득행위를 부정한 취득행위로 취급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 경우 역시 해당 산업기술의 부정취득에 해당하게 된다. 그러나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3호 전단에서는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동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에서는 이러한 행위를 동법 제14조 제1호의 위반행위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고 있다. 따라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동일한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하는 규정을 중복해서 규정하고 있다.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부정 취득·유출 산업기술에 대한 악의의 취득행위 뿐 아니라 이를 사용·공개하는 행위도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부정 취득·유출 산업기술에 대한 악의의 취득행위가 선행되지 않고서는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악의의 취득행위가 선행된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용이나 공개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불과하게 된다.

## 2) 산업기술 취득 후 악의의 사용·공개 행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3호 후단에서는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또는 제2호(산업기술의 부정 유출·사용·공개 행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에서 의해서 처벌된다. 예컨대 '제3자가 부정취득한 산업기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를 정상적으로 거래하여 구매하거나 우연히 입수한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해당 산업기술이 부정취득된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면 산업기술 취득 후 악의의 사용·공개 행위에 해당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sup>11)</sup>이라면 그것이 부정취



득된 산업기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하거나 무상으로 또는 우연히 입수할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존재할 수 없다. 어쨌든 부정취득된 산업기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거래하거나 무상으로 또는 우연히 입수한 경우<sup>12)</sup>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3호 후단의 규정에 위반되는 '산업기술 취득 후 악의의 사용·공개 행위'로 처벌될 수 있다.

#### 4.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유출 사실의 부지에 관한 중대한 과실과 산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 행위 및 산업기술 취득 후 사용·공개 행위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4호에서는 제1호(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 또는 제2호(산업기술의 부정 유출·사용·공개 행위)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취득·사용 및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에 그 산업기술에 대하여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36조 제3항에 의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함으로써 고의범죄의 경우와 비교하여 60%에 해당하는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다만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유출 사실의 부지에 관한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산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 행위 및 산업기술 취득 후 사용·공개 행위는 그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라도 가중처벌되지는 않는다. 또한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유출 사실의 부지에 관하여 보통의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처벌범위에서 제외하고 있다. 특히 등은 등록에 의한 공시성을 가지지만, 산업기술은 공시성이

11)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이라 함은 제품 또는 용역의 개발·생산·보급 및 사용에 필요한 제반 방법 내지 기술상의 정보 중에서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분야의 산업경쟁력 제고 등을 위하여 법령이 규정한 바에 따라 지정 또는 고시·공고하는 기술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국내에서 개발된 독창적인 기술로서 선진국 수준과 동등 또는 우수하고 산업화가 가능한 기술, (나) 기존제품의 원가절감이나 성능 또는 품질을 현저하게 개선시킬 수 있는 기술, (다)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커서 국가기술력 향상과 대외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할 수 있는 기술, (라) 가목 내지 다목의 산업기술을 응용 또는 활용하는 기술

12) 부정취득된 산업기술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해당 산업기술을 입수한 증명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없으므로 부당하게 기술거래를 제한할 위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한다.<sup>13)</sup>

여기서도 중대한 과실로 부정 취득·유출사실을 알지 못하고 산업기술을 취득하는 행위와 중대한 과실로 부정 취득·유출사실을 알지 못하고 산업기술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를 동일하게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중대한 과실로 부정 취득·유출사실을 알지 못하고 산업기술을 취득한 이후에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는 중대한 과실에 의한 취득행위의 불가벌적 사후행위라고 보아야 한다.<sup>14)</sup>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4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산업기술 취득 후 중대한 과실로 부정 취득·유출사실을 알지 못하고 해당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의 실체에 관하여는 논리적 의문이 제기된다. 즉 이러한 행위는 산업기술 취득 당시에는 해당 산업기술이 부정 취득·유출된 사실의 부지에 대하여 무과실 또는 보통의 과실만이 인정되고, 추후에 이를 사용·공개하는 시점에서 취득한 해당 산업기술이 부정 취득·유출된 사실의 부지에 대하여 중대한 과실이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현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의문이다. 과실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산업기술의 취득 이후에 그것의 부정 취득·유출사실을 알지 못하는 과실보다도 최초 해당 산업기술의 취득 시점에서 그것의 부정 취득·유출사실을 알지 못하는 과실이 훨씬 중대하게 평가되는 것이 원칙적이고 일반적일 것이기 때문이다. 이 부분은 명백한 입법자의 입법오류로 보여 진다.

## 5. 승인 없는 국가핵심기술<sup>15)</sup>의 수출과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명령 불이행<sup>16)</sup>

13) 이경렬,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2009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학술회의, 2009.11. 60면.

14) 이에 관하여는 上記 II., 3., '(1) 부정 취득·유출 산업기술에 대한 악의의 취득·사용·공개 행위' 참조.

15)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2. "국가핵심기술"이라 함은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산업기술을 말한다.

16) 논의의 집중을 위하여,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인 없이 국가핵심기

## 1) 승인 없이 국가핵심기술을 수출하는 행위

산업기술유풀방지법 제14조 제5호에서는 지식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얻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을 추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sup>17)</sup>에 의하여 동법 제14조 제1호와 제2호 및 제3호의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그러나 산업기술유풀방지법이 국가핵심기술의 수출행위가 아니라 수출추진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는 비판<sup>18)</sup>이 제기되고 있다. 즉 미승인 내지 부정 승인 수출추진행위에 대해서는 그 미수범(동법 제36조 제6항) 뿐 아니라 예비·음모죄(동법 제37조)도 처벌하고 있는데, 수출추진행위의 미수 내지 예비·음모행위를 상정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비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출추진행위의 예비·음모행위는 얼마든지 상정할 수 있지만, 수출추진행위의 미수를 상정하기는 곤란하기 때문이다.

## 2)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명령 불이행

산업기술유풀방지법 제14조 제6호에서는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지식경제부장관의 수출증지, 수출금지, 원상회복 등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에 위반한 행위는 동법 제36조 제1항과 제2항<sup>19)</sup>에 의하여 동법 제14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위반과 동일하게 처벌된다.

술을 수출하는 행위'와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명령 불이행' 행위에 관하여는 여기서 간단한 소개로 대신한다.

- 17) 그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 18) 양영준, 산업기술의 유풀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 법률내용의 검토 및 부정경쟁방지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보안 연구논총 제3호, 2007, 23면; 이경렬,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2009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학술회의, 2009.11, 60-61면.
- 19) 그 산업기술을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되게 할 목적으로 행위한 경우에 대한 가중 처벌 규정.

### III. 한국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처벌규정의 문제점 및 대안

#### 1. 산업기술 유출행위의 정립

한국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정확하게 정립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마련하였다는 문제점이 드러났다. 즉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2호에서는 기본적으로 산업기술의 비밀유지의무자가 산업기술을 유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동법 제36조에서는 이를 처벌하고 있다. 또한 산업기술의 유출행위와 동일한 차원에서 그 유출한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를 나열하여 유출행위와 동일하게 처벌한다. 그러나 산업기술의 비밀유지의무자가 해당 산업기술을 권한 없이 사용하거나 공개하거나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 자체가 산업기술 유출행위에 해당한다. 특히 제3자가 사용하게 하는 행위는 행위자가 산업기술을 제3자에게 공개하는 행위에 의해서 실현된다. 즉 동어반복의 방법으로 동일한 행위를 여러 행위형태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가별적인 산업기술의 유출행위는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같은 특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물론 산업기술 유출에 대하여 권한이 있는 경우라면 가별적인 범죄행위로 구성될 수 없음은 당연하다. 따라서 가별적인 산업기술 유출행위는 권한 없는 유출로서 충분하다.

제14조 제2호가 산업기술 유출의 행위주체를 비밀유지의무자로 한정하여 신분범의 형태로 규정한 것은 타당하다. 유출이라는 개념은 내부에서 외부로 반출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유출행위는 비밀유지의무자에 의하여 산업기술이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행위로 파악된다.

또한 산업기술 유출행위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처벌해야 하는 가장 기본적인 범죄형태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규정의 위치도 제14조 제2호가 아니라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해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행위는 '제34조의 규정 또는 대상기관과의 계약에 따라 산업기술에 대한 비밀유지의무가 있는 자가 그 산업기술을 권한 없이 유출하는 행위'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 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외부로부터 빼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정립

산업기술의 유출행위가 비밀유지의무자에 의하여 산업기술이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가는 행위로 이해되는 반면에,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사용·공개 행위는 외부로부터 산업기술을 빼가는 행위를 규정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여기서는 행위주체가 제한될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산업기술 유출행위와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산업기술을 빼가는 행위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탐지하고 입수하는 과정을 거쳐 이를 사용·공개하는 단계적 절차를 거치게 된다. 다만 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하는 단계는 산업기술을 빼간 이후 범행목적 달성의 단계라고 볼 수 있다. 행위자의 목적달성을 별도의 범죄행위로 구성할 것인가는 순전히 입법자의 입법판단의 문제라고 보여진다. 다만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사용·공개를 추가적인 독립적 범죄로 구성한 것이 아니라, 가능한 모든 산업기술 침해행위를 다양하게 포함시킴으로써 형벌의 공백을 배제하려는 의도라고 파악된다. 따라서 산업기술의 사용·공개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빼가는 행위자의 범행목적으로 구성하는 것이 적절하다. 즉 '권한 없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목적'을 산업기술을 빼가는 범죄행위의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으로 규정함으로써 해당 범죄를 목적범으로 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sup>20)</sup> 다만 자신이 권한 없이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목적 이외에 권한 없이 제3자로 하여금 산업기술을 사용하게 하거나 공개하게 할 목적도 포함해야 한다. 물론 행위자가 제3자에게 해당 산업기술을 공개하지 않고서는 '제3자로 하여금 산업기술을 사용하게 하거나 공개하게 할 목적'을 상정할 수 없다. 이러한 점에서 '제3자로 하여금 산업기술을 사용하게 하거나 공개하게 할

20) 구체적으로 산업기술을 사용·공개함으로써 발생하는 손해는 사법적 구제를 통하여 해결하면 충분하다.

목적'은 중복된 과잉의 요건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제3자로 하여금 산업 기술을 사용하게 하거나 공개하게 할 목적'은 행위자의 주된 목적을 법문에 명확하게 표시한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외부로부터 빼가는 행위도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과 같은 특정한 방법이나 수단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권한 없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목적'으로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외부로부터 빼가는 행위라면 충분한 가벌성이 인정된다.

산업기술을 외부로부터 빼가는 행위는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입수하는 것이다. 다만 행위자는 반드시 산업기술을 대상기관으로부터 직접 입수해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는 부정된다. '권한 없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목적'으로 해당 산업기술을 입수한 행위에 대해서는 그 입수 경로에 관계없이 이미 충분한 가벌성이 인정된다. 여기서 어떤 경로나 누구로부터 산업기술을 입수하였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다. 이는 법률해석의 문제가 아니라 입법의 문제이므로 법문을 이러한 관점에서 구성해야 한다.

산업기술을 외부로부터 빼가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산업기술을 입수함으로써 완성된다. 다만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스파이 내지 경제스파이 행위로부터 산업기술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므로 '권한 없이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탐지하는 행위는 이미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에 대한 유효한 공격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산업기술의 탐지시점에서 해당범죄의 기수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sup>21)</sup> 다만 산업기술의 탐지는 개념적으로 직접 대상기관에 대해서 행하여져야 한다.

이에 따라 산업기술을 외부로부터 빼가는 행위는 '권한 없이 대상기관의 산업 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목적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거나 공개하게 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입수하거나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탐지하는 행위'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21) 간첩죄에 대해서 인정되는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산업기술의 탐지행위에 대해서도 그 미수죄나 예비·음모죄를 인정하는 것이 얼마든지 가능하다.



### 3. 불법 유출·입수 산업기술의 악의 입수와 취득 후 악의의 사용·공개

#### 1) 불법 유출·입수 산업기술의 악의 입수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3호 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 취득·유출 산업기술에 대한 악의의 취득·사용·공개 행위'와 유사한 차원에서, '불법 유출·입수 산업기술을 악의로 입수하는 행위'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행위는 上記의 '권한 없이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사용하거나 공개할 목적으로 산업기술을 입수하는 행위'에 포섭된다. 따라서 이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 2) 불법 유출·입수 산업기술 취득 후 악의의 사용·공개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14조 제3호 후단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 취득·유출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악의로 사용·공개하는 행위'와 유사한 차원에서, '불법 유출·입수된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악의로 사용·공개하는 행위'가 논의의 대상이 된다. 비록 현실적으로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보호의 대상이 되는 산업기술이라면 그것이 불법 유출·입수된 산업기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할 수 있는 경우란 거의 존재할 수 없다고 할지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도 배제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불법 유출·입수된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악의로 사용·공개하는 행위'는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 규율해야 할 행위로 평가된다.

다만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불법 유출·입수된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악의로 사용·공개하는 행위'와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입수 행위'를 동일한 형으로 규율함으로써 경한 불법을 고려하지 아니하는 결함이 있다.<sup>22)</sup> 또한 일반적으로 불법 유출·입수된 산업기술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취득할 수 있

22) 즉 악의로 사용·공개하는 경우라도 입수과정이 악의가 아닌 경우라면 처음부터 악의인 경우와 비교하여 마치 형법 제360조의 점유이탈물 횡령죄와 제355조 제1항의 횡령죄(독일 형법 제246조 제1항의 횡령죄와 제2항의 위탁물횡령죄) 사이의 불법차이가 인정된다.

는 경우란 거의 존재할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규정은 이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을 뿐이다. 예컨대 산업기술을 입수한 후에 그것이 불법 유출·입수된 산업기술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에도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한 행위자가 “해당 산업기술의 입수 당시 그것이 불법 유출·입수된 산업기술이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고, 수사기관에서는 반대의 증명을 할 수 없을 때 적용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수사기관에서 반대의 증명을 할 수 없으면 이 규정을 적용하고, 반대의 증명을 할 수 있으면 上記 ‘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외부로부터 빼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정립’에서 제시한 ‘산업기술 불법 입수’에 대한 처벌규정이 적용된다.<sup>23)</sup> 반대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와 반대의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되는 것은 형의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부당하다. 따라서 불법 유출·입수 산업기술 취득 후 악의의 사용·공개행위에 대해서는 ‘산업기술 불법 입수’에 대한 처벌보다 경한 법정형으로 규정해야 한다.

### 3)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입수 사실의 부지에 관한 중대한 과실의 경우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중대한 과실로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입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산업기술을 입수하거나 또는 산업기술 취득 후 중대한 과실로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입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공개하는 행위<sup>24)</sup>를 고의범의 경우와 비교하여 대략 60%에 해당하는 법정형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과실범을 경미하게 예외적으로 처벌하고 있는 형법의 입장과 배치되며,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이 없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이 경우 비록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지라도 행위자는 정상적으로 산업기술을 입수한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정상적으로 입수한 산업기술이므로 이를 사용·공개하는 것이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여기게 된다. 산업기술의 보호가 단순히 기

23) 현행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서는 두 경우 모두 동일한 법정형이 규정되어 있다. 반대의 증명을 할 수 없는 경우: 동법 제14조 제3호, 제36조 제1항, 제2항; 반대의 증명을 할 수 있는 경우: 제14조 제1호, 제36조 제1항, 제2항.

24) 산업기술 취득 후 중대한 과실로 산업기술의 불법 유출·입수 사실을 알지 못하고 사용·공개하는 행위라는 것은 비현실적인 상황이다. 이에 관하여는 上記 II., ‘4. 산업기술의 부정 취득·유출 사실의 부지에 관한 중대한 과실과 산업기술의 취득·사용·공개 행위 및 산업기술 취득 후 사용·공개 행위’ 참조.

술보유자의 개인적 이익을 넘어서 국가경제적 차원의 문제<sup>25)</sup>로 인식되고 있으나, 정상적으로 산업기술을 입수한 것으로 여기거나, 또는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여기는 행위에 대해서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다.

#### IV. 결론

한국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종합적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산업기술의 유출에 대한 형사처벌규정도 마련하였다. 본법에서 입법자는 산업기술을 두텁게 보호하는데 집중하였으며, 이에 따라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빠짐없이 형사처벌규정에 포섭하려고 하였다. 그 결과 동일한 불법행위가 여러 조항에서 중복되는 문제가 드러났고, 이에 따라 명확하고 분명해야 할 형사처벌조항을 구성하지 못하였다.

또한 입법자는 산업기술의 부정취득 부정유출의 방법으로 절취·기망·협박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한정함으로써 산업기술 유출행위를 모두 포괄하지 못하는 문제를 발생시켰다. 권한 없는 산업기술의 유출만으로 충분한 불법성을 구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절취·기망·협박이나 취득 등의 개념은 산업기술이라는 개념과 조화를 이룰 수 없는 용어으로써 본법에서 사용하기 적절하지 아니하였다.

산업기술은 내부에서 외부로 빠져나갈 수 있으며, 또한 외부에서 빼가는 방법이 있다. 전자를 불법 유출의 관점<sup>26)</sup>에서 후자를 불법 입수<sup>27)</sup>의 관점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면 거의 대부분의 산업기술 유출을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거의 상정하기 쉽지 아니한 영역으로 '불법 유출·입수된 산업기술을 취득한 후 악의로 사용·공개하는 행위'가 있으며, 이 행위는 불법유출에 비하여 경미한 형벌

25) 김준동,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논의 자료집, 2007.05.21, 21-22면.

26) 상기 III, '1. 산업기술 유출행위의 정립' 참조.

27) 상기 III, '2. 대상기관의 산업기술을 외부로부터 빼가는 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의 정립' 참조.

을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sup>28)</sup> 산업기술 유출과 관련된 과실행위에 대해서는 그것이 중과실이라 할지라도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이나 또는 민사법적 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주제어 : 산업기술유출방지법(Das Gesetz gegen den ungerechte Ausfluß der industriellen Technik); 산업스파이(Spionage in Industrie); 산업기술 불법유출(Der ungerechte Ausfluß der industriellen Technik); 산업기술의 형사법적 보호(Das strafrechtliche Schutz einer industriellen Technik)

---

28) 상기 III, 2, '(2) 불법 유출·입수 산업기술 취득 후 악의의 사용·공개' 참조.

## 참 고 문 헌

- 권오걸, 형법각론, 형설출판사, 2009
- 권오걸, 형법총론, 제3판, 형설출판사, 2009
- 김성돈, 형법각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김성돈, 형법총론, 제2판,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9
- 김성천/김형준, 형법각론, 제2판, 동헌출판사, 2006
- 김성천/김형준, 형법총론, 제3판, 동헌출판사, 2005
- 김일수/서보학,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7
- 김일수/서보학, 형법총론, 제11판, 박영사, 2006
- 김정환,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대한 형사법적 검토, 형사정책연구 제20권 제2호, 2009
- 김준동, 산업기술유출방지법 제정의 의의, 산업기술유출방지법에 대한 논의 자료집, 2007.05.21
- 박상기, 형법각론, 제7판, 박영사, 2008
- 박상기, 형법총론, 제8판, 박영사, 2009
- 배종대, 형법각론, 제6개정판, 홍문사, 2007
- 배종대, 형법총론, 제9개정판, 홍문사, 2008
- 손동권, 형법각론, 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6
- 손동권, 형법총론, 제2개정판, 율곡출판사, 2005
- 양영준,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관한 소고 - 법률내용의 검토 및 부정경쟁방지법과 비교를 중심으로, 산업보안 연구논총 제3호, 2007
- 오영근, 형법각론, 제2판, 박영사, 2009
- 오영근, 형법총론, 제2판, 박영사, 2009
- 이경렬, 산업스파이범죄의 실태와 대처방안, 2009년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추계학술회의, 2009.11
- 이재상, 형법각론, 제6판, 박영사, 2009
- 이재상, 형법총론, 제6판, 박영사, 2008
- 이정원, 형법각론, 인터넷공개 제1판, 2009
- 이정원, 형법총론, 인터넷공개 제1판, 2009

이형국, 형법각론, 법문사, 2007

임웅, 형법각론, 개정판 제2보정, 법문사, 2009

임웅, 형법총론, 개정판 제2보정, 법문사, 2008

정성근/박광민, 형법각론, 제3판, 삼지원, 2008

정성근/박광민, 형법총론, 제4판, 삼지원, 2008

정영일, 형법각론, 개정판, 박영사, 2008

정영일, 형법총론, 개정판, 박영사, 2007

진계호/이준걸, 형법각론, 제6판, 대왕사, 2008

진계호/이준걸, 형법총론, 제8판, 대왕사, 2007

Jescheck/Weigend, Lehrbuch AT, 5. Aufl., 1996

Leipziger Kommentar, StGB, 11. Aufl., 1993

Nomos Kommentar, StGB, 2. Aufl., 2005

Roxin, Lehrbuch, AT I, 4. Aufl., 2006

Schönke-Schreoder Kommentar, StGB, 27. Aufl., 2006

Welzel, Lehrbuch AT, 11. Aufl., 1969

Wessels/Hettinger, Strafrecht BT/1, 31. Aufl., 2007



[Zusammenfassung]

## Über die Problematik in Strafregelungen gegen den ungerechten Ausfluß der industriellen Technik im Korea

Lee, Jeong-Weon

Prof. Dr. Jur. an der Universität Yeungnam

Das Gesetz gegen den ungerechte Ausfluß der industriellen Technik von Korea ist ein grundliches und ein gesamtes Gesetz, die industriellen Technik in Korea zu schützen. Das Gesetz enthält sich auch die Strafe, um den ungerechten Ausfluß der industriellen Technik zu bekämpfen. In diesem Gesetz wollte der Gesetzgeber von Korea nur für das dichtiges Schutz der industriellen Technik konzentrieren und alle ungerechte Ausflüsse der industriellen Technik ohne Ausnahme unter Strafe stellen. Damit ergibt es sich manche Probleme, wie z. B. daß gleiche Unrechtstaten in verschiedenen Paragräpfen wiedergeholt werden und die Straftatbestände nicht so klar und nicht so bestimmt sind.

Das Gesetz gegen den ungerechten Ausfluß der industriellen Technik von Korea hat sich als Mittel für die unrechtliche Einnahme oder für den ungerechten Ausfluß nur auf die Wegnahme, die Täuschung, die Drohung und die anderere rechtswidrige Weise eingeschränkt. Damit konnte das Gesetz sich nicht alle mögliche ungerechte Ausflüsse der industriellen Technik in seiner Regelungen umfassen. Denn der Unrechtsgehalt eines ungerechten Ausflusses einer industriellen Technik nur mit dem unbefugten Ausfluß genug erfüllen könnte.

Die industriellen Technik könnte von Innen nach Außen ausgeflossen, und von Außen herausgezogen werden. Wenn man den ersteren im Bezug auf den ungerechten Ausfluß, und den letzteren im Bezug auf die ungerechte Beschaffung verstehen würde, dann könnten fast alle mögliche Formen des ungerechten Ausflusses einer industriellen Technik darin umfasst werden. Nun mehr könnte eine Unrechtshandlung, die nachdem eine ungerecht ausgeflossene oder beschaffene industrielle Technik erwerbt und dies wissentlich veröffentlicht, mit der Wirklichkeit nur selten auftauchen. Gegen diese Unrechtshandlung sollte es aber nur mit der geringeren Strafe genügen. Gegen die fahrlässigen Handlungen im Bezug auf dem Ausfluß der industriellen Technik, auch wenn es sich um grobe Fahrlässigkeit handelt, wäre eine Strafahndung nicht geeignet.